

고용정책분권화 시대의 지역 일자리노동정책과 거버넌스 방향 모색

김 종 진 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oint



지역 일자리 문제

- 1) 노동시장 현실과 문제점
- 2) 현 정부 일자리 정책들



국내외 일자리&노동 정책

- 1) 해외 지역 일자리노동정책
- 2) 국내 지역 일자리노동정책



일자리 접근법과 흐름

- 1) 일자리 논의와 흐름
- 2) 일자리 지표와 조건들



일자리 거버넌스 방향

- 1) 일자리 거버넌스
- 2) 향후 과제와 합의

1-1 문제인식 - 왜 지역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가?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실태

정부 통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32.5% → 학계 통계 비정규직 비율 43.6%(KLSI)

-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19.7% →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 32.8%
- ✓ 저임금 근로자 비율 2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11.6%(246만명)
- ✓ 연간 근로시간 2,113시간(OECD 2위)
- ✓ 정규직 임금 '100'일 경우 → 비정규직 임금 '49.1' 수준

	유럽		한국	
	노동법	노동기준	노동법	노동기준
중앙정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지방정부	있음	있음	없음	없음

한국 :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업무

1-2 지자체 일자리 문제 접근 - 서울시

- ✓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증가 및 사회적 불평등 확대
- ✓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후 →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 사용자' 역할 필요성 강조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 201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발표
- ✓ 2011년 서울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국내 최초 지자체 수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 시행

○ 한국 주요 지자체 일자리 정책 영역

- ① 자체 일자리 창출과 지원
- ②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이행
- ③ 부문별 사업 : 여성, 어르신, 돌봄 등
- ④ 제3섹터, 사회적 경제
- ⑤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
- ⑥ 경제산업 부서 사업(투자, 기업)



○ 한국 지자체 노동정책 수립 현황

- ✓ 광역 지자체
 - 서울, 광주, 경기, 충남
- ✓ 기초 지자체
 - 경기 안산, 성남
 - 충남 아산

한국 : 서울시 → 일자리종합계획, 노동정책종합계획 → 지자체 최초 일자리, 노동정책 조례, 각 위원회(거버넌스 구조)

1-3 새 정부 일자리 정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지자체(서울, 광주 등), 국회,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 비정규 정규직화 주요 변화 포인트

→ 파견용역 전환 대상 포함, 상시지속 기준(9개월)



세계일보

2017년 05월 22일 월요일
013면 종합

전국 지자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지역	내 용
대구	2017년 내 분청,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18년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580여명 단계적 정규직화
인천	다음 달 중 수요조사 후 정규직 전환규모 확정
대전	분청, 5개 구청, 산하 공사·공단 등 비정규직 인원 파악 후 정규직 전환
광주	2017년 내 비정규직 696명 전원 정규직 전환
울산	로드맵 등 대책 마련
세종	정규직화 위한 TF 구성
경북	2017년 내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 비정규직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50명 일반직·무기계약직으로 분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비정규직 총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인차적 정규직화
충남	올해부터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명 연차적 정규직 전환
충북	종합 대응계획 수립

자료:각 지자체

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 후 정부와 발맞추는 지자체

정규직 전환 속속 동참

광주시 696명·대구시 700여명
올해·내년까지 전원 정규직화
경북·충남 등은 단계별로 시행
일부 지자체, 재정적 부담 호소
"인건비 총액 제한제도 손박아야"

울산·대구·천안·이보람·문종규·김정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로드맵을 밝히거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춰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각 시·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분청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대구시설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35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분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기관에서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580여명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시설공단과 시 분청, 대구의료원 3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비정규직 69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경북도와 충남도는 단계별 정규직화에 나선다. 경북도는 올해 1단계로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 비정규직 433명 중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50명을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분청(29명)과 도의회(6명), 직속기

관(146명), 사업소(123명)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등을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꾼다.

충남도 올해부터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 명을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꾼다. 충남은 201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정부 기준 인건비 규모가 나오면 수요 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436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했다. TF는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여부 등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이 정해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로드맵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기간제 근로자 1200여 명이 있다.

충북도와 종합 대응계획 수립에 나선 예정이다. 계획 수립에 앞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분청과 10여 개 산하 기관 비정규직 810여 명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대전시는 분청 각 부서와 5개 구청, 산하 공사·공단 등의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서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 수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는 지자체도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준인건비를 대폭 올려주느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1-4 새 정부 일자리 정책 - 국정과제 각 영역별 주요 핵심 사안

더불어 사는 경제(26)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 | |
|----|-------------------------------|
| 16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 17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
| 18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 19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
| 20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
| 2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
| 22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과제목표 (63)

- ✓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과제목표 (64)

-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 ✓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 | |
|----|-------------------------------------|
| 63 |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 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
| 65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
| 66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국정전략

-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③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5 새 정부 일자리 정책 - 국정과제 각 영역별 주요 핵심 사안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5/9)

-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 ✓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확립
- ✓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계획 수립
- ✓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 ✓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 ✓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 패자부활 오뎅이 프로젝트
- ✓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
- ✓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

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6/1)

- ✓ 일자리중심 행정/정책체계 구축
- ✓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 공공부문: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 공공부문 일자리총원로드맵 수립, 경영평가편람 일자리 관련 지표 반영
 - 민간부문: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확대,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확대
 - 지역특화일자리, 사회적경제: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지역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 ✓ 일자리 질 높이기
 - 공공-민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로드맵 마련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1-6 새 정부 일자리 정책 - 국정과제 각 영역별 주요 핵심 사안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개
민간일자리 창출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개
	근로여건 개선	9개
맞춤형일자리지원	청년·여성·신증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8번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축소('17년 19.5% → '22년 9.1%)
-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 →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 생명·안전 직결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 축소) 등

9번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간 연계성을 강화

10번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 * 구직촉진수당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 마련('18.1/4)

- **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 → (개선) 가족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

2-1 일자리 문제 접근 ‘프레임 변화’

노동체제(labor regime)

- ✓ 노동정책,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정치 등 국가의 노동문제나 정책이라는 행위주체 문제 초점
- ✓ 노동체제는 노, 사, 정 3주체 중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약화와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사용자’와 ‘정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관심 초점이 노동시장 즉, 고용체제로 변화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

- ✓ 노동시장이 국가정책과 자본 그리고 노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구조화되는 양식으로 규정(이중노동시장 :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 ✓ 주요 업종과 직종의 미시적인 고용관계와 노동과정의 변형이나 파편화고 다층적인 고용관계 기본적 특징

➤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

: 자유시장경제 모델(LMEs → 영미 모델) **vs.** 조정된 시장경제 모델(CMEs → 유럽 모델)

➤ 자본의 고용관계 전략

: 하이-로드(High-road) 전략 **vs.** 로-로드(Low-road) 전략

[Bosch, 2005; Tilly, 2005; Mehaut et al, 2010; Appelbaum, 2010; Hatton, 2011]

2-2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 논의 - 좋은 or 관찮은 일자리(decent work)

- ◆ **ILO**: 1999년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이라는 보편적 조건하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촉진 위해 「관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정책개념 정립 & 측정지표 제시
 - ✓ 11개 범주의 29개 지표: 고용기회, 금지노동(예: 아동노동), 적정소득, 적정 노동시간, 고용안정, 일-가정양립, 고용평등, 작업환경 안전,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 ◆ **EU**: 2001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고용의 질(Quality in Work, QiW)」의 10대 기준 공표
 - ✓ QiW의 10대 기준: 일자리이동 기회, 숙련개발, 양성평등, 작업장 보건/안전, 고용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접근가능성, 일-생활균형, 노동자참여 및 사회적 대화, 다양성과 형평성(차별금지), 업무성과
 - ✓ 일자리 유형화: 장래성 없는 일자리(dead-end job),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 합리적 수준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 ◆ **OECD**: 2003년 저임금, 직무스트레스 및 산재사고, 고용불안 등에서 벗어난 「관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판별기준 제시

2-3 국제기구, 해외 주요 논의 - 좋은 or 관찬은 일자리(decent work)

1.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흐름

전세계적으로 지구화(Globalization)와 디지털(4차)혁명 및 서비스경제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등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급증 → 불안정노동계급(Precariat)의 생활 위기와 사회적 분노/저항/갈등 확산

2. 국제기구 '좋은 일자리 강조'

2000년대 초반 이후 OECD 등의 국제기구 → 일자리 양 못지 않게 일자리 질 강조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정책기조

➤ 일자리 중요성

- ① 개인 : 생활소득의 원천이자 사회적 관계 기반
- ② 사회 : 국가경제에의 노동력투입/생산단위이자 국민복지 1차적 해결조건/자족적 토대

2-4 좋은 일자리로서 ‘고용의 질’ 지표들

고용의 질 지표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한국(Seoul)
고용 기회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할 노동)	본질적인 일자리 질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과 통합	일자리 창출&협약 → 서울시 일자리협약
고용 안정성		일자리 안정성	유연성과 안정성	고용안정성 → 비정규직 정규직화
능력 개발		없음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교육훈련개발 → 비정규직 교육훈련
소득 불평등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직접적 비교지표 無 → 업무성과, 노동생산성 지표	최저임금 현실화 → 생활임금 도입
근로 조건	노동 시간	적절한 근로시간	-	적정 노동시간 → 노동시간 단축 모델
	작업 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직장보건과 안전	작업장 안전과 보건 → 생명안전 직영화, 감정노동
고용평등		고용상의 공정성처우	양성평등 다양성과 비차별	평등권 확대 → 차별침해 제거
일과 가정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	작업조직 및 일과 생활 균형	일과 삶의 균형. 모성보호 → 여성친화적 고용모델
참여 발언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사회적 대화, 노조 조직률 → 노동이사제
사회 보장		사회보장	-	취약계층 사회보장 → 청년보장제, 청년수당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 국제규약, 헌법의 노동인권 기준(세계인권선언, ILO, 헌법 32조, 33조, 34조),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기준
→ ILO, EU, OECD 등 ‘고용의 질’ 지표, 보편적 노동인권 관점 → 취약계층 노동인권 개선에 초점

3-1 해외 주요 선진 나라들, 지방정부 ‘도시의 일자리, 노동 정책’

일자리정책

- ✓ 독일 뮌헨, 함부르크
- 취약계층
- 이주노동, 한부모 가족

- ✓ 독일 베를린, 브레멘
- ✓ 미국 위스콘신
- 지역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노동정책

- ✓ 미국, 영국
- 생활임금
- ✓ 핀란드, 네덜란드
- 기본소득

- ✓ 독일 볼스부르크
- ✓ 이탈리아 보첸
- ✓ 스웨덴 예테보리
- 노동시간 단축

지원 조직

- ✓ 오스트리아, 독일
- 노동자회의소

- ✓ 영국
- 민중의 집

- ✓ 미국
- 노동자센터

➤ 서울시 노동정책 : 일자리&노동, 의제, 보호&지원 조직 → 모두 실행 특징

- ✓ 일자리노동 ‘국’ 출범, 일자리 & 노동 정책 분야별 조례
- ✓ 일자리종합대책,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정책 기본.종합계획 수립

한국 : 서울시 노동정책 →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 구분

3-2 해외 주요 선진 나라들, 지방정부 ‘도시의 일자리, 노동 정책’

✓ **독일 브레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Gute Arbeit in Bremen)

✓ **미국 위스콘신 노사민정**

‘도시의 일 10가지 프로젝트’
(Cities at work)

✓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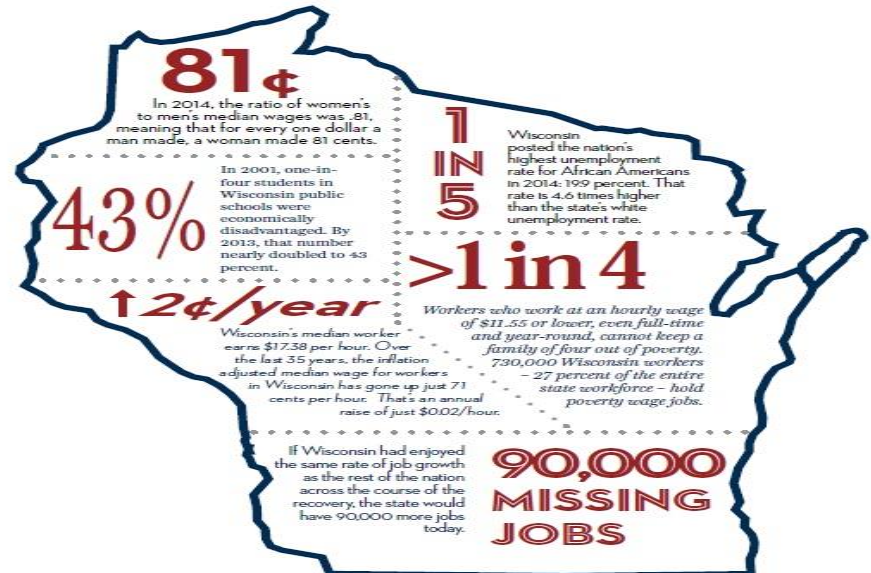
50만달러 이상 건설 프로젝트
커뮤니티 노동력협정

Community Workforce Agreement

→ 지자체 보조금 지급조건

‘표준임금, 복지’, ‘사회적 책임 기금’

**위스콘신 지역 COWS
지역 노동지도(Labor Map)**



- ① 지역자산지도
- ② 생활임금과 복지 → 공공부문 생활임금과 복지, 고용형태 조건 충족 기업 한정 조례(고용의 질 입주조건 조례)
- ③ 지자체 보조금 지급조건 : 표준임금과 복지 기준 요구(뉴멕시코주 산타페)
- ④ 면세기관 사회책임 : 공공, 종교기관 등 소유 재산 조세 의무 대신 시범 프로그램 지출(사회적 책임 지출)
- ⑤ 사회책임 기금
- ⑥ 공원 등 인프라 (미시간주 제네시카운티)
- ⑦ 건강/안전영향 평가 : 취약 노동자 안정영향 평가 등(조지아주 아틀란타)
- ⑧ 이주노동자 보호 : 이주노동자 보호, 지역사회 일원 정착
- ⑨ 취약층 복지 강화 : 노년, 청년 사용 도서관 카드, 멤버십 카드 등 복지센터(호환)
- ⑩ 차별시정 방안 강구 : 비정규직, 성, 국적 등 차별적 대우 제한

[사례] 독일 브레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Gute Arbeit in Bremen)

-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 목표
2016년 8.5 유로 법정 최저임금 시행

<공공계약기관 위탁업체>

계약서류, 업무 종류, 근로시간, 임금지급 등의 제반
노동조건 모니터링 → 계약해지

1. 공공계약기관 위탁신고

: 신고 후 자동으로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 발송(위탁내용, 위탁기관, 장소, 기간, 수입기업, 계약액수 등 기재)

2.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서 임의 선정해 감독시행

: 주로 건물청소, 건축, 안전요원, 정원관리, 이사업체 등

3. 공공계약기관 직접 감독 또는 제3기관에 감독(변호사, 건축사 등) 의뢰. 보통 2주 정도 시간 소요

4. 일반적으로 두 명의 감독관이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조사

5.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업무 종류, 시간당 수당,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등 질문조사

6. 근로계약서, 임금장부, 위탁계약서를 비롯한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제출 요청

7. 위반사항 없을 시 감독 종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공계약기관에 신고

8. 적발 시 공공계약기관은 수탁기업에 민사상 제재를 가하고 수탁기업은 향후 2년간 브레멘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더라도 공공계약기관에 의해 즉시 계약해지 가능

[사례] 독일 브레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Gute Arbeit in Bremen)

- 공공부문 내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목표
공공조달 정책에 사회적 책임 조항(ILO, 산업협약 등)

지역 구분	법령	적용범위 (유로)	시간당 최저임금 (유로)	ILO 핵심조약 준수	그 밖의 사회적 조건
베를린	베를린 공공조달법 (2010.6.8)	10,000	8.50	o	남녀평등촉진, 도제훈련 일자리
바덴-뷔템베르크	바덴뷔템베르크 단협준수법 (2013.4.10)	20,000	8.50	x	없음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 공공조달법 (2011.9.21)	10,000	8.50	x	없음
브레멘	공공조달법과 단협준수법 (2009.11.24)	10,000	8.50	o	남녀평등촉진, 도제훈련 일자리, 장애인 고용
함부르크	함부르크 공공조달법 (2010.4.27)	제한 없음	8.50	o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 우
니더작센	니더작센 공공조달법 (2008.12.15)	10,000	8.50	o	남녀평등촉진, 도제훈련 일자리, 장애인 고용, 장기 실업자 고용

3-3 국내 지역 일자리 노동정책의 접근 - 서울시 사례

서울시 일자리 노동행정과 정책 수립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작

서울시민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 및 증진과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_ 서울시민 권리선언(2011.10.19.)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의 역할 3가지

- ✓ 제도 설계(rule setting)
 - 조례 제정, 개정
- ✓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
 - 정책, 사업 집행
- ✓ 평가 감독(monitors)
 - 이행 점검, 사후관리

서울시 노동 및 일자리정책 조례

- ①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14.3.20)
- 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2015.1.2)
- ③ *서울특별시 아르바이트 권리장전(2015.9.23)*
- ④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2015.10.8)
- 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2016.1.7)
- ⑥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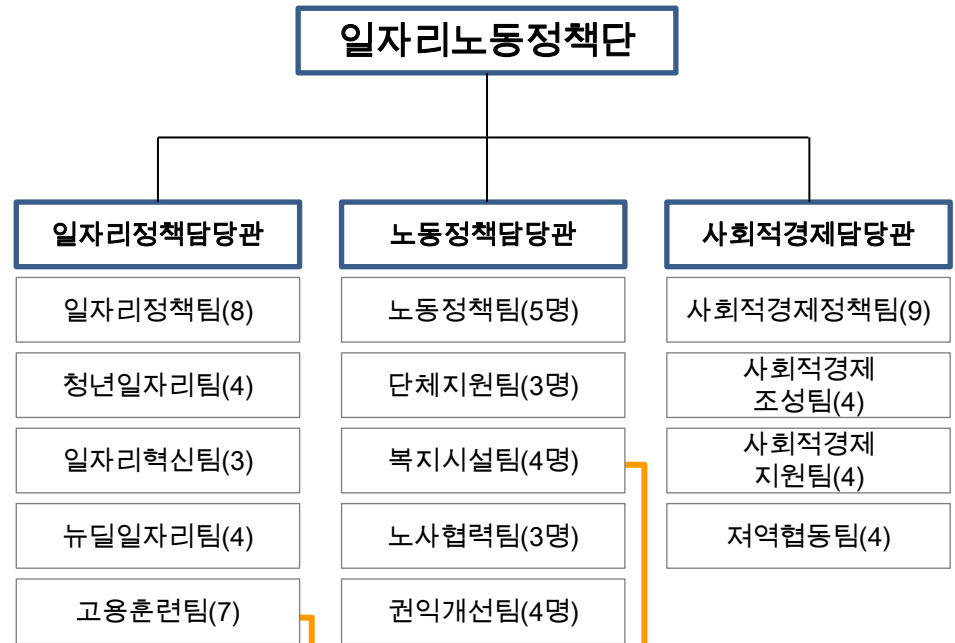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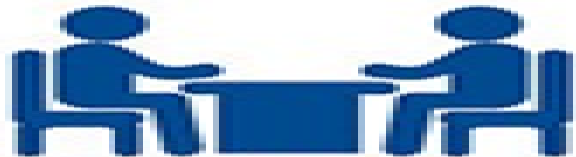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장전은 조례가 아닌 서울시 선언과 각 기관과의 협약

3-4 국내 지역 일자리 노동정책의 접근 - 서울시 사례

서울시 일자리노동행정 특징

“지속 가능한 정책”

- ① 제1부시장 직속 설치 - 일자리노동국 (3개과)
- ② 일자리노동정책 부서 총 인력 (14개 팀 60명)
- ③ 거버넌스 시스템 (각 분야별 위원회 설치)
- ④ 지원조직 (5개 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카페, 서울노동권익센터, 청년허브 등)



- ✓ 공공행정조직 및 지원조직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단 이외에 청년정책관(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여성정책과(직장맘센터), 어르신(어르신돌봄종합센터, 50플러스센터) 각 부분별 지원센터
- ✓ 공공거버넌스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 노사정모델협의회(서울모델협의회)

3-5 국내 지역 일자리 노동정책의 접근 - 서울시 사례

서울시 일자리노동행정 특징

“지속 가능한 정책”

1.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s)

- ✓ 양대노총과 공동의 대화와 지속적인 협치 구조
-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정책 의견 교환 및 소통

2. 사회적 협약(social agreement)

- ✓ 지자체 공공부문 노사정 일자리 창출 협약
- ✓ 지자체 민간부문 노사민정 일자리 창출(모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801 신규 일자리 창출 노사정 협약

3. 사례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 ✓ 노사정 일자리 공동 창출 서울협약
- ✓ 공공부문 업종별 노사민정 모델 준비
- ✓ 청년 일자리 창출 - 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1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2기)
공통점	- 일자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수행, 일자리 정책성과 및 일자리 효과 평가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실업대책 지원 - 고용률 및 일자리의 질 제고 - 중앙정부 및 민간영역과의 협력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일자리 창출정책 지원 - 경제·산업정책 연계 통한 고용률 제고 - 근로자 권익보호 - 서울시-민간영역 협력기능 강화

4-1 일자리 거버넌스의 시작 - 새 정부 일자리위원회 설치

◆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정책 3C(Control Tower, Coordinator, Confirmer) 역할 수행

- 대통령 위원장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관련 단체 대표 위원 구성
-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정책개발부 & 운영지원부) 편제

➤ 청와대 일자리수석: 일자리·노동정책의 대통령 참모/총괄 역할

- 일자리기획·고용노동·사회적 경제 비서관 체계

➤ 고용노동부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지역인적자원개발위)

➤ 국가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 ✓ 일자리 위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노동개혁 방향의 정책 해법 제시
- ✓ But) 인수위 없는 집권 초기의 국정 상황하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노동정책 추진에 만만치 않은 제약 조건 엄존

4-2 일자리 거버넌스 - 지자체 파급효과?

-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지자체 행정에 적잖은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정책-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지자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침-경영평가 정비-적용
 - 지역맞춤 노사상생(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전북·시흥·속초 컨설팅 시행, 대전·창원·김천 등 벤치마킹 확산),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추진 (+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지방이전 정책 지원 등)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 행정 강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무비 부담 증대

- ◆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책 공약,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 및 행정개선 기대심리 상승
 - 성과연봉제 등의 과거 정부 정책/행정지침 폐기 또는 정비
 - 지역/업종 수준 정책협의 활성화와 노동계 실질적 참여 보장 요구 증대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동계 기대 상승

4-3 일자리 거버넌스 - 제주지역 시사점

1. 2018년 노동민생문제, 지자체 선거 핵심 이슈 부각 전망 (문재인 정부 일자리·노동정책 추진 여파?) → 일자리 위기와 노동양극화 그리고 청년 취업난 등
2. 더불어성장 패러다임의 '늘-줄-높' 정책방향 구현
3. 제주지역 차원의 지역맞춤형 일자리·노동정책 모델 개발 필요 ☞ 문재인 정부 및 서울-광주 대상의 정책 벤치마킹
4. 제주도 일자리·노동정책 추진시스템 구축 필요
 - ✓ 제주도 일자리·노동정책 비전, 명확한 정책목표 마련-제시
 - ✓ 제주도 일자리·노동 정책추진 행정조직(일자리노동정책관 등), 지역사회 정책협의 거버넌스 확립-가동(일자리위원회 등)
 - ✓ 제주지역 '시·동' 일자리 관련 정책 촉진-지원-협의 강화
5. 제주지역 일자리 질, 지역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취업난, 산업구조
 - 구체적 현황실태 파악과 정책개발 위한 전문가풀 구성-학습모임 활성화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 일자리노동전문학자, 연구자?, 지역 노동시장 통계?]

4-4 일자리 거버넌스 - 지역차원 고용 의제와 모색

1. 일자리고용정책 의제들

- ✓ 지역 고용유지 제고와 참여 → 산업구조조정
- ✓ 고용서비스 개선 종합적 확대 → (프) 미션 로컬
- ✓ 저임금 구조 개선 → 공공부문 하도급 문제 개입
- ✓ 최저임금제도 지역화 전략 → 생활임금
- ✓ 지역수준 노동력 숙련형성 조직적 개입

2. '포용 도시' - 차별, 불평등 해소

-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 청정도시
- ✓ 청년, 여성, 이주 등 확대된 일자리노동정책
- ✓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논의(두리누리사회보험)
- ✓ 중앙 정부 정책과 조응하는 정책 모색
- ✓ 자영업형 프랜차이즈 지원과 개선

이탈리아 보첸(Bozen)



도나우 시의 시간의 정치 워크샵 참가자(가족과 양육 부분)

- 시간구조 파악, 유연한 시간
- 인간중심적 시간문화- 시간계획 가이드라인
 - ① 10분 안에 어디든지
 - ② 아침에는 도시를 학생들에게
 - ③ 시민 목요일, 시간정치 대학, 타임코드(보첸의 시간들)
 - ④ 시간관속소/시간관리센터 설치

독일 브레멘-베게삭(Bremen-Vegesack)



독일 베를린 인근 할레(Halle)시 Saale구 '시간의 정치' 로고

- 시간과 도시의 질, 프로젝트
- 시민친화적 구형 운영 '시간관리실'
- 일상 친화적 배차 만들기 포럼(협력 네트워크)
 - ① 서비스 모임: 근무시간 협상조정 '시민의 날'
 - ② 교통 모임: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 ③ 양육 모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기
- '네트워킹, 협력, 참여 및 소통' 4가지 활동

3. 지역 일자리노동 거버넌스 전략

- ✓ 다양한 위원회, 협의체 비전&체계 &역할 정립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 ✓ 일자리노동 특보, 전문가 풀 연계(학계, 연구자)
- ✓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조례, 정책, 행정, 지원)



제주고용

포럼 발표 슬라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